



ISSN 2765-2777

고령 사회의 심과 일

VOL. 23

The Life & Work in the Aged Society

여
름
호

2026

특약노동법 시행과 노인일자리





표지 이야기



여주시노인복지관 응급안전안심지킴이
김동호 씨

안전에 취약한 노인이나 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대상자의 안전을 확인하고 장비
를 점검하는 김동호씨에게 노인일자리
는 '인생의 공부'이다.

권두언

**02 통합돌봄 시대,
노인일자리사업의 새로운 역할**
양난주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현장을 가다!

**06 지역사회와 함께 자라는
노인일자리 시흥실버인력뱅크**
최성원 인구포커스 대표

우리동네 노인일자리

**12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돌봄·안전 강화,
여주시노인복지관 응급안전안심지킴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홍보기획부

통계리뷰

**20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 여건과 현황 분석
: 노인일자리 연계 가능성을 중심으로**
김현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센터장

정책이슈

28 통합돌봄과 노인일자리 연계 방안
홍선미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36 전주시 통합돌봄과 노인일자리 연계 사례를
통해 본 노인일자리사업 개선 방안**
한진아 전주시청 노인복지과 팀장

통합돌봄 시대, 노인일자리사업의 새로운 역할

2026년 3월부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되면서 전국으로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이 확대되었다. 2019년부터 시작된 선도사업에 전국에서 16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여 한국판 커뮤니티케어정책 구현을 모색한 지 8년만의 일이다. 2023년부터 추진된 두 번째 시범사업에도 12개 기초지자체만 참여했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된 2025년부터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전국으로 확대된 통합돌봄사업의 시행을 위해 촉박하게 대응해 왔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던 곳에서 나이 들 수 있는 사회'를 만든다는 통합돌봄사업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목표로 하며, 기존 사회복지사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와 어떠한 관계를 맺는지 여전히 명료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금 우리는 시설·병원 중심 돌봄, 가족책임주의 돌봄 패러다임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패러다임으로 전환되는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구(舊)패러다임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업과 관행에 대한
성찰을 통해 변화를
모색하는 태도이다.
통합돌봄시대에 노인
일자리사업의 새로운
역할과 과제를 찾는 노력도 여기 속한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통합돌봄사업은 고령자와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성인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 기반 사회적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우선 읍면동 창구에서부터 기초지자체에 이르는 공적 전달체계를 만들고, 요양병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아우르는 판정 체계를 도입하고 지역의 다양한 의료·요양·돌봄 제공 주체들과 협력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이는 질병이나 고령이나 장애로 인해 혼자서 거동하지 못하는 '성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익숙한 생활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가족이 돌봐줄 수 없으면 지역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시설에 보호해 왔던 종전의 사회복지와 차별성을 가진다. 아프거나 장애가 있거나 고령이어서 살아온 마을과



그 안에서 맺은 관계들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권적이고 존엄한 삶이라는 철학에 기초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회적으로 지원할 때도 하나의 복지급여나 프로그램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건강과 필요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원을 연계·조정하여 '통합적인 돌봄'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지향을 밝히고 있다.

문제는 우리 사회가 현재, 이 아름다운 지향을 실현할 수 있을 만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지역별로 충분히 갖추고 있느냐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의료와 장기요양제도에서 정부는 재정과 규제 책임을 주로 맡고 민간 주체들이 참여한 시장을 통해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해왔다. 그 결과, 초기에 정부가 적은 재정을 투입했어도 민간이 설립한 시설에 의해 서비스 기반이 단기간에 크게 확대되

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주도하여 서비스를 표준화하고 대상별 사업별 제도로 만들어 도입하고 공급은 지역의 민간 주체들에게 맡겨둔 결과는 어떠한가? 서비스 전달체계는 파편화, 분절화되고 제도 간 형평성도 떨어졌으며 양적 확대에도 사각지대가 줄어들지 않는다고 아우성친다. 그뿐만 아니라 기관·지역 간 서비스 격차는 물론 서비스 제공 인력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 '통합돌봄'의 필요성을 부각한 배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통합돌봄 시대를 열어가려는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사회서비스 제공 주체들은 가장 먼저 지역에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필요에 주목해야 한다.

그동안 노인일자리사업은 저소득 노인에 대한 보충적 소득보장 역할로 조명되어 왔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약 70%가 공익형 일자리에 속해 있다는 점이 노인일자리사업의 소득보장 기능을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된다. 공동체형 일자리, 역량강화형 일자리, 고령자 인턴 등의 시도에서 단순 사회활동 이상으로 고령자 일자리를 자리매김하기 위해 분

투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기도 한다. 노인일자리사업이 지렛대가 되어 고령사회에서 노동시장의 성격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도전은 의미 있고 유효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여전히 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로 높고, 공적 연금이 여전히 든든한 노후 소득보장제도가 되고 있지 못하기에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고령자의 소득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노인 일자리 유형이 정부 지원 급여 수준을 기준으로 구분된다는 점 역시 소득보장 기능을 보여준다. 그런데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소득을 보충한다고 해서 노인일자리사업의 수많은 참여자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해 온 유·무형의 가치와 성과가 간과되는 것은 아니다.

이제까지도 그러했지만 통합돌봄 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고령자에게는 더욱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의 기회가 필요하다. 돌봄을 가족 내부의 책임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로 확장하여 촘촘한 돌봄관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65세 이상 고령자 모두에게 요양보호사가 필요한



통합돌봄 패러다임을 통해 우리 사회가 시설중심 돌봄, 가족전담 돌봄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제도적 서비스의 발전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일상 속에서 서로 돕고 연결하는 다양한 실천들이 조직될 수 있어야 한다.**

것은 아니다. 고령자의 건강 수준은 천차만별이다. 육체가 노쇠하여 거동이 어렵기도 하지만, 정서적으로 고립되고 위축되어 아픈 사람도 있다. 고령자 대부분에게 다양한 차원의 돌봄이 필요하지만, 그 내용과 방식은 각기 다를 수 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그물망을 짜기 위해 돌봄의 공적 전달체계를 잘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고 제도와 서비스 간 연계도 원활하게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서 거동하기 어려워진 사람들을 찾아가는 지역사회 차원의 다양한 상호돌봄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아프고 장애가 있고 노쇠한 주민들이 살아온 지역을 떠나지 않고 어울려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상당히 다양한 관심과 지원과 사회서비스가 필요하다. 현재 선택지는 요양병원, 요양시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등에 제한되어 있다. 표준화된 주간보호와 방문요양은 그 자체로 전문성을 높여야 하겠지만 노인일자리사업은 표준화된 서비스와 다르게 다양한 필요에 대응하는 지역 활동을 기획하고 지역사회에 고령자들이 서로 돕는 공간을 만들

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 현재 통합돌봄사업을 추진하는 지역마다 무엇이 필요하고 부족한지 찾아 참여자들의 활동으로 엮어내는 일이 필요하다.

그동안 노인일자리사업은 적지 않은 돌봄형 일자리를 만들어냈고, 지역사회 돌봄의 연결망을 구성해 왔다. 통합돌봄사업을 계기로 노인일자리사업은 좀더 적극적으로 고령 참여자들이 오랫동안 살아온 지역의 관계망을 토대로 사회적 연대를 만드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우리는 서로 다양한 도움을 주고 받으며 살아간다. 생애주기에 따라 상이한 사회적 역할을 하면서 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다. 통합돌봄 패러다임을 통해 우리 사회가 시설중심 돌봄, 가족전담 돌봄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제도적 서비스의 발전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일상 속에서 서로 돕고 연결하는 다양한 실천들이 조직될 수 있어야 한다.** 통합돌봄 시대의 노인일자리사업은 단순한 소득보장사업을 넘어 지역사회 돌봄 관계망을 형성하는 사회적 기반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와 함께 자라는 노인일자리 시흥실버인력뱅크



최성원
인구포커스 대표

시흥실버인력뱅크는 4호선·수인분당선 정왕역에서 도보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었다. 건물 3층과 4층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처음 3층으로 올라가자 다시 4층 사무실로 안내받았다. 각 층 공간 곳곳에는 상담이나 교육, 사업 운영을 위해 방문한 참여자들이 오가고 있었고, 작은 규모의 공간 안에서도 현장의 분주함이 느껴졌다. 이곳에서 약 1,800명의 노인일자리 참여자와 270여 개 수요처가 연결되고 있다는 설명을 들으니, 공간의 크기보다 훨씬 큰 현장의 밀도가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2000년 노인자원봉사센터로 출발한 이 기관은 2006년 '실버인력뱅크'로 명칭을 전환하며 노인일자리사업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시작했다. 실버인력뱅크는 경기도에서 발전해온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모델로, 노인자원봉사와 사회참여 기능을 기반으로 운영되어 온 특징이 있다. 한때 경기도 전역에서 운영되던 실버인력뱅크는 시니어클럽과의 통합 등을 거치며 현재는 11개 기관만 운영되고 있다.

시흥실버인력뱅크는 그 가운데 하나로 지역사회형 노인일자리 모델을 꾸준히 확장해 오고 있다. 인터뷰는 기관 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송은정 부장과 함께 진행되었다.



왼쪽부터 시흥실버인력뱅크 송은정 부장, 인구포커스 최성원 대표

노인일자리 '지역사회 참여'로 바라보다

송은정 부장은 시흥실버인력뱅크의 핵심 철학을 설명하며 “노인일 자리를 단순한 소득 지원으로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어르신들이 가진 경험과 역량을 지역사회와 연결하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역할과 보람을 느끼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관의 슬로건 역시 “활기찬 노년의 미래를 디자인하다”다.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관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삶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지향한다는 뜻이다.

실제로 이곳은 참여자를 단순한 노동력이 아니라 지역사회 자산으로 바라본다. 송 부장은 “참여한 분 한 분의 역량을 파악해 지역사회 수요와 연결하는 것이 인력뱅크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그래서 참여자 상담도 단순 접수 수준에 머물지 않는다.

어떤 경험을 해왔는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어떤 삶의 의미를 찾고 싶은지를 세심하게 듣는다.

“노인일자리도 지역 특성에 맞아야 한다”

시흥시는 오랫동안 ‘젊은 도시’로 불려왔다. 신도시 개발과 인구 유입이 활발했고, 최근까지도 노인 인구 비율이 10% 미만이었다. 하지만 상황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젊은 세대와 함께 고령층 유입도 늘어나면서 돌봄과 생활 지원 수요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송은정 부장은 노인일자리 역시 지역 특성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떤 지역에서 성공한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지역에서도 그대로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지역의 산업 구조, 인구 특성, 참여자들의 학력과 경험 수준까지 다 고려해야 합니다.”

시흥실버인력뱅크



실버장애인서포터즈



승강기안전지원단



응급안전안심지킴이

송은정 부장은 시흥실버인력뱅크의 핵심 철학을 설명하며
“노인일 자리를 단순한 소득 지원으로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어르신들이 가진 경험과 역량을 지역사회와 연결하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역할과
보람을 느끼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흥실버인력뱅크
송은정 부장

그래서 시흥실버인력뱅크는 돌봄과 지역사회 지원 중심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왔다. 현재 운영 중인 대표 사업 가운데 하나는 지역아동센터 및 초등학교 돌봄교실 지원사업이다.

처음에는 학교 현장에서 큰 반응이 없었다. 하지만 맞벌이 가정 증가와 늘봄학교 확대 흐름 속에서 수요가 빠르게 늘어났다. 지금은 오히려 학교 쪽에서 먼저 요청이 들어올 정도다. 특히 교사 출신이나 어린이집 근무 경험자 등 전문성을 가진 참여자들이 많아 현장 만족도도 높다고 한다. 현장에서는 “핵가족화 속에서 아이들이 할머니·할아버지 같은 정서를 경험한다”는 반응도 나온다고 했다.

참여자 수준도, 참여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

송은정 부장은 최근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의 변화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소득 보전을 위한 참여가 많았다면, 이제는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려는 욕구가 훨씬 강해졌다는 것이다. 물론 여전히 생계 보완 목적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최근에는 사회 기여나 자기 역할을 찾기 위해 참여하는 어르신들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기관에는 전직 공무원, 기술자, 사업가 출신 참여자들도 적지 않다. 한 참여자는 응급안전안

심지킴이 사업에 참여한 뒤, 개선점과 정책 제안을 A4용지 세 장 분량으로 정리해 전달했다고 한다.

“예전에는 기관이 사업을 제안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요즘은 참여자님들이 먼저 이런 일 자리를 해 보고 싶다고 제안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참여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편의점 사업도 시작됐다. 과거 유통업이나 계산 업무 경험이 있는 어르신들이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제안했고, 고민 끝에 사업을 시작했다. 현재는 두 개 매장이 운영 중이다.

송은정 부장은 이런 변화를 보며 “노인일자리가 더 이상 단순 생계형 사업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제는 사회 기여와 자기실현 욕구가 함께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참여 방식 역시 다양해지고 있다. 매일 일정하게 일하기를 원하는 참여자가 있는가 하면, 일주일에 이틀 정도 집중적으로 활동하고 나머지는 개인 활동이나 취미생활에 쓰고 싶어 하는 참여자도 늘고 있다고 했다.

통합돌봄과 연결되는 노인일자리

시흥실버인력뱅크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통합돌봄 영역과의 연계다. 기관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애인 지원사업 등과 협력하며



인구포커스
최성원 대표

노인일자리를 지역 돌봄체계 안으로 연결해 왔다.

예를 들어 응급안전안심지킴이 사업에서는 참여자들이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 기기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법을 안내한다. 또 공공행정업무지원단 참여자들은 동주민센터와 협력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기도 한다.

송은정 부장은 이런 연계가 가능했던 이유로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꼽았다.

“수행기관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지자체 의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시흥시는 공공기관과 연결할 때 행정적으로 많이 지원해 줬고, 그 덕분에 사업이 훨씬 빠르게 자리잡을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노인맞춤돌봄기관이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 등과의 협력 역시 중요한 기반이었다

고 설명했다. 처음에는 기존 돌봄기관들이 노인자리 수행기관과의 협업을 낯설어하기도 했지만, 지속적으로 현장을 설명하고 협력 구조를 조율하면서 지금의 연계체계를 만들어왔다는 것이다.

작은 조직, 큰 현장

시흥실버인력뱅크는 규모가 큰 기관은 아니다. 실무 인력도 제한적이다. 하지만 오히려 그런 환경 속에서 현장 중심 운영 역량은 더 단단해졌다는 인상을 받았다.

송은정 부장은 “우리 기관은 참여자들과 직접 대면하는 일이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전화만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참여자의 어려움과 수요를 계속 확인한다는 것이다.

소규모 수행기관의 현실적 어려움도 적지 않다. 제한된 운영비와 인력 속에서 사업 개발, 참여자 관리, 교육, 수요처 발굴까지 동시에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것은 결국 현장인 만큼,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과정에서 기관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보람’이다.

“학교 앞 교통안전을 하면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갈 수 있다는 보람을 느끼시고, 공원을 청소하면 시민들이 깨끗한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를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관은 참여자 교육 때마다 왜 이 일이 지역사회에 필요한지, 어떤 가치를 만드는지 반복해서 설명한다고 했다. 단순한 일자리 관리가 아니라 ‘사회참여의 의미’를 함께 전달하는 것이다.

노인일자리는 미래 사회의 중요한 인프라

인터뷰 말미, 송은정 부장은 초고령사회 속 노인 일자리의 미래 역할에 대해 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돌봄 수요 증가 속에서, 결국 지역사회를 지탱할 중요한 인적 자원은 어르신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시와 자동차가 확대될수록 사람을 직접 돌보고, 공감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역할의 중요성은 오히려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일은 시가 대체할 수 있겠



경기시흥실버동행편의점 1호점

지만, 사람을 돌보고 삶의 경험을 나누는 일은 결국 사람이 해야 합니다. 어르신들의 책임감과 공감 능력은 큰 강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의 노인일자리는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인 일자리는 수행기관 중심이 아니라 참여자 중심이어야 합니다. 어르신들이 정말 하고 싶고, 보람을 느끼는 일이 무엇인지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정왕역 인근 작은 공간 안에서도 수많은 참여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현장의 밀도가 느껴졌다. 시흥실버인력뱅크는 그렇게 ‘일자리’라는 이름 안에 지역사회, 돌봄, 관계, 그리고 삶의 의미를 함께 담아가고 있었다.



왼쪽부터 시흥실버인력뱅크 송은정 부장과 인구포커스 최성원 대표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돌봄·안전 강화, 여주시노인복지관 응급안전안심지킴이

인터뷰 여주시노인복지관(실버인력뱅크) 박지혜 담당자, 김돈호 참여자, 강동원 참여자

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홍보기획부

사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홍보기획부

단순 안전 장비 점검을 넘어 지역 안전망 구축을 위한 돌봄 사례



왼쪽부터 박지혜 담당자, 김돈호 참여자, 강동원 참여자

지난 3월부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이 전면적으로 시행되면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통합돌봄의 대상은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의료·요양·돌봄 등의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과 의료 필요도가 높은 심한 장애인이다. 특히 대상자들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집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와 대상자들과 대상자들의 가족 모두 심리적·경제적 간병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동시기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고시」도 제정되면서 노인일자리 사업 내의 ‘우선지정일자리’ 유형을 안내했다. ‘우선지정일자리’는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우선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노인일 자리를 의미한다. 이 내용에는 ‘지역의 돌봄 종합 지원’ 유형이 포함되어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른 통합지원을 위한 직무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증가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노인일자리 역할, 노인일자리에서의 돌봄 직무에 대한 세부 유형 지정 등 통합돌봄과 노인일자리 연계 방안의 필요성의 의미를 보여 준다.

이번 호 ‘우리동네 노인일자리’에서는 여주시노인복지관(실버인력뱅크)의 응급안전안심지킴이 사업단을 만나 현장에서의 활동 모습을 보고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ICT(정보통신기술) 장비를 활용하여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응급상황에 24시간 신속하게 대응하는 비대면 돌봄



2024년(4차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맥내장비

서비스다. 장비 점검과 안부 확인 등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노인일 자리를 연계하였으며, 노인일자리 우선지정일자리 내 지역의 돌봄 종합 지원 유형에서 검토가 되고 있다. 전국에서 최초로 응급안전안심지킴이 사업을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현장에서 어떻게 노인일자리로 연계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Q. ‘응급안전안심지킴이’는 어떤 사업단인가요?

박지혜 — 여주시노인복지관의 응급안전안심지킴이 사업은 독거 어르신이나 안전 취약 어르신 댁을 방문해서 응급 호출기나 화재감지기 같은 장비를 점검하고 어르신들의 안부 확인을 하는 사업입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면서 응급상황을 예방하고,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Q. ‘응급안전안심지킴이’사업은 어떤 계기로 시작 되었나요?

박지혜 ____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와 장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었지만, 응급 관리 요원 인력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또 장비 오작동이나 사용 미숙 사례도 있어 정기적인 점검과 교육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여주시노인복지관에서는 노인 일자리와 연계해 어르신들이 직접 장비 점검과 안전 확인 활동에 참여하는 ‘응급안전안심지킴이’사업을 전국에서 여주시가 처음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Q. 현재 이 노인일자리에는 몇 분의 어르신이 참여하고 계시고, 주로 어떤 분들이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를 받고 계시나요?

박지혜 ____ 현재 20명의 어르신이 참여하고 있으며,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 가정에 방문해 장비 점검과 안전 확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독거 어르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응급상황 위험이 있는 안전 취약 어르신들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대상자 가정에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생활 상태와 안전 여부를 함께 확인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복지관 상담이나 복지서비스 연계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Q. 그렇다면 이 사업에는 어떤 특성을 가진 참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박지혜 ____ 일단 어르신들과 소통이 잘돼야 되고요. 책임감 있게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단순 점검이 아니라 안전을 확인하는 활동인 만큼 꼼꼼함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



여주시노인복지관 전경

각합니다.

Q. 참여자분들은 어떤 계기로 노인일자리에 참여하게 되셨나요?

김돈호 ____ 서울에서 사업을 30여 년간 하다가 정리 후 여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던 중 2024년도 노인일자리 모집 공고를 보고 복지관의 담당자분께 여러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 사업이 제 적성에 맞을 것 같아 신청하게 되었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강동원 ____ 젊은 시절 약 25년간 직업군인 생활을 하고 이후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정년 퇴직을 하고 나서 지내다가 약 5년 전에 여주로 내려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노인복지관의 2024년 노인일자리 모집 안내 공고를 보고 행정, 사무 업무를 보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하고 상담하는 것을 좋아하여 제 적성과 맞다고 생각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Q. 두 분 모두 3년 째 신청하셔서 참여하고 계시는데, 실제 현장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김돈호 ____ 응급상황 시 안전에 취약한 노인이나 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대상자의 안전을 확인하고 장비를 점검합니다. 2인 1조로 활동하는데, 주로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하루 3시간 씩 한 달에 20일 근무합니다.

강동원 ____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

희 조는 올해 담당한 가정이 일흔일곱 가구입니다. 하루에 한 가구를 정해서 방문하고 그 대상자 가정에 각종 장비나 센서가 걱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이상은 없는지 점검을 하고 점검표를 작성합니다. 이상이 발견된 장비는 현장에서 조치 가능한 사람이 처치를 하고, AS가 필요한 장비는 수거해서 복지관에 반납합니다. 또한 대상자에게 각 센서의 기능과 용도를 설명 드리고 특별히 응급 호출하는 방법은 설명을 하면서 실습까지 진행합니다. 이러한 사항이 끝나면 대상자와 대화를 통해서 애로 사항 유무, 건강 상태 이상 유무를 체크하고, 방문 후에는 방문 결과를 종합해서 단체 메신저로 전달하면 복지관 담당자가 필요한 사항을 피드백하고



수행인력의 안내에 따라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댁내장비 조작법 실습

있습니다.

Q. 장비 점검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는데 장비 점검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들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강동원 ____ 집 안 전체를 총괄하는 ‘게이트웨이’라는 장비가 있고 출입 감지기, 활동 감지기, 화재감지기, 응급 호출기 같은 센서 장비입니다. 대상자가 정상적으로 출입을 하는지,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이런 상황들이 다 감지되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는 화재 경비가 울리도록 이런 장비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계의 팡창 여부라든가 각 센서나 건전지나 통신 상태가 양호한지 이런 상황을 점검합니다.

Q. 노인일자리에 참여하시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김돈호 ____ 각 가정에는 태블릿으로 되어 있는 게이트웨이가 있고, 각 센서가 집 안 여러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게이트웨이에 통신 상태와 각 센서의 배터리 소모량이 전부 표시됩니다. 게이트웨이를 확인했을 때 배터리 양이 적게 남아서 배터리를 교체한다거나 또는 통신이 차단되어 있어서 연결이 안 됐을 때에는 그걸 복구하고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되면 그때 제일 보람 있고 기쁩니다.

Q. 노인일자리 활동을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실까요?

김돈호 ____ 어느 날 대상자 댁에 방문을 했는데 안부를 여쭙보니까 며칠 전에 집에 도둑이 들었다고 하는데, 다행히도 도둑이 놀라서 도망을 갔다고 합

니다. 이유는 출입문을 열자마자 “문이 열렸습니다”라는 멘트가 나와서 놀랐다고 합니다. 이런 일을 겪으신 후 안전 장비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대상자 분의 에피소드가 기억에 남습니다.

Q. 참여하시면서 힘드셨거나 어려웠던 점은 없으셨나요?

김돈호 ____ 저희가 가정방문을 하다 보니 대상자 성향에 따라서는 집에 외부인이 들어오는 것을 꺼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가 방문하는 목적이 라든가 이유를 설명을 잘 드렸어도 이해를 시켜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강동원 ____ 처음 업무 시작할 때는 장비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도 갖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무를 하다 보니 매월 1회 복지관 담당자로부터 직무교육도 받고 또 업무 매뉴얼을 통해서 저희가 개인 학습을 하다 보니 지금은 응급안전장비에 대해서는 거의 응급조치나 필요한 정비를 할 수 있는 기술을 갖췄기 때문에 현재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Q. 보람도 느끼시고 어려운 점도 많이 느끼시고 계시는데, 노인일자리 참여하기 전과 후에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김돈호 ____ 아무래도 전에는 집에서 놀고 있으니까



대상자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댁내장비를 확인 중인 김돈호 참여자



현관문 출입 감지 센서 설치를 위해 수치를 점검 중인 김돈호, 강동원 참여자

게으르게 지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일자리에 참여하면서부터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바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Q. 노인일자리 참여하면서 좋았던 점을 뽑으라면 어떤 것을 뽑으실 수 있으실까요?

김돈호 — 일단 경제적으로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었고, 어디를 나간다는 것, 출근한다는 것 그것이 저는 제일 좋은 점입니다.

강동원 — 대상자분과 대화를 하다 보면 그분들의 살아온 과정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현재 어떻게 살고 계신지를 보면서 나의 삶을 반추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새로운 친구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점에서 좋았습니다.

Q. 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박지혜 — 일단 정기적인 교육과 꾸준한 방문 활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장비 점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생활 상태를 함께 살피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복지관 상담이나 다양한 복지서비스로 연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교육과 방문 활동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Q. 현재 다른 지자체나 기관에서도 응급안전안심

지킴이 사업을 진행 중인데 여주시노인복지관만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박지혜 — 여주시노인복지관은 단순 장비 점검이 아닌 **지역 안전망 구축**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응급관리 요원과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함께 협력하는 현장 중심 운영체제**를 구축해 보다 촘촘하게 안전관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Q. 나에게 노인일자리란 어떤 의미인가요?

김돈호 — 저에게 노인 일자리는 **‘인생의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자리에 참여하며 대상자들의 각기 다른 노후 생활이 저에게는 앞으로 보내야 할 삶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강동원 — 저에게 노인일자리는 **‘보약 같은 친구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노래 제목이기도 한데요, 가사를 보면 ‘자식보다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가 좋다. 자네와 나는 보약 같은 친구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바로 노인일자리는 저에게 이런 보약 같은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Q. 마지막으로 시니어분들과 참여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돈호 — 노인일자리는 자신의 역량에 따라 이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참여해 보십시오, 마음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강동원 — 노인일자리 참 좋은 제도입니다. 우리 시니어 세대들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어려운 이웃이나 지역사회에 마지막 봉사할 수 있는 기회의 터전이고 또한 참여자 본인

에게는 육체적·정신적 건강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겁니다. 젊었을 때의 화려한 경력은 집에 다 벗어버리고 적극 참여해서 활동해 보십시오.

여주시의 응급안전안심지킴이 사업은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이라는 목표를 두고, 서비스가 진행되는 현장과 협력하는 운영체제가 잘 갖춰져 지역사회에서 돌봄·안전 영역의 노인일자리로 자리 잡았다.

현재 정부에서는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노인일자리를 통해 전국화가 가능하고 사업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통합돌봄 사업들을 집중 지원하여 통합돌봄의 정착을 지원하고자 한다. 통합돌봄 내 5대(위기가구 발굴, 건강관리, 식사 지원, 주거환경 개선, 위생 지원) 노인일자리 유형을 만들고, 우선 지정 일자리로 지정하여 인력을 우선적으로 배치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노력할 것을 의무화하고자 한다.

초고령화사회 지역사회의 돌봄 영역에서 ICT, AI 등의 기술적인 수단이 일부 역할을 하지만, 그 기기들을 관리하며 사람 간의 소통으로 채워지는 부분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 통합돌봄 지원 노인일자리는 통합돌봄의 정착에 기여도 하지만 돌봄을 받기만 하는 노인이 아닌 지역사회 돌봄을 강화에 기여하는 노인을 노인일자리를 통해 보여주는 사례다. 응급안전안심지킴이와 같은 노인일자리 또한 그에 해당된다. 여건을 제대로 파악하고 현장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효과적인 통합돌봄 지원 노인일자리사업이 정착되길 기대해 본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제공 여건과 현황 분석

: 노인일자리 연계 가능성을 중심으로



김현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센터장

알기 쉬운 요약

- ◎ 지역별로 노인 인구 규모와 독거노인 비율,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의 운영 여건에 차이가 존재하며 장기적으로는 지역 간 돌봄서비스 격차의 문제로 나타날 수 있음
-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방문안전, 가사 지원, 이동지원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제공 비중이 높으며, 사회참여 및 생활교육 영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 전담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는 지역사회 돌봄의 핵심 인력이지만, 지역별 인력 규모와 담당 이용자 수에는 차이가 존재함
- ◎ 향후 통합돌봄 체계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인역량활용사업 등 지역 내 보완 인력과 연계 가능성 검토가 필요함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그리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현주소

2026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이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단순 안부 확인 중심의 서비스를 넘어, 지역사회 내 취약 노인을 조기에 발굴하고 건강 악화를 예방하는 핵심 전달체계로 기능하고 있다. 최근에는 예방적 돌봄 강화와 지역 자원 연계를 중심으로 서비스가 확대·추진되고 있으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내 핵심 기반 서비스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 확대가 곧바로 현장의 인력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전담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구조이며, 서비스의 안정적 수행 여부는 종사자의 역량과 수행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수준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지역별 고령화 수준과 독거노인 규모, 수행기관 수, 종사자 규모 및 서비스 제

공 여건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차이는 장기적으로 지역 간 돌봄서비스 격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현재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운영 여건과 인력 구조를 점검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별 보완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글에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관련 통계를 활용하여 지역별 서비스 제공 여건과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노인일자리사업 등 지역 내 다양한 인력 자원과의 연계 가능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광역별 노인돌봄 현황과 서비스 제공 기반: 어느 지역에서 돌봄 수요가 높은가?

20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제공되는 17개 광역별 인구 현황과 서비스 여건을 살펴보면 지역적 차이가 있음이 확인된다(<표 1>). 2026년 2월 기준 전국 노인 인구는 약 1,112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1.6%를 차지하고 있으며, 독거노인은 약 247만 명



으로 전체 노인 인구의 22.3%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라남도(28.6%), 경상북도(27.6%), 강원특별자치도(27.1%), 전북특별자치도(26.7%) 순으로 고령화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향후 돌봄 수요가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독거노인 비율 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 강원특별자치도 순으로 높게 나타나, 해당 지역은 돌봄 수요뿐 아니라 돌봄 공백 위험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으로 볼 수 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운영 여건 역시 지역별 차이를 보였다. 전국 평균 기관당 이용자 수는 696명이었으나, 전라남도는 1,071명, 경상북도는

906명, 충청남도는 875명으로 나타나 일부 지역의 기관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서울특별시, 경기도, 세종특별자치시는 기관당 이용자 수가 500명 내외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통합돌봄 환경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역별 돌봄 수요와 수행기관의 운영 여건을 반영한 차등적 지원체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20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및 종사자 및 서비스 제공 현황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제공되는 광역 단위의 실

제 운영 규모를 들여다보면 지역마다 담당 이용자의 규모가 다를 수 있다(<표 2>). 2026년 2월 기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는 전담사회복지사 2,607명, 생활지원사 33,910명으로 총 3만 6천여 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이용자 현황을 보면 일반돌봄군은 505,908명, 중점돌봄군은 43,462명, 퇴원 후 돌봄군은 9,891명으로 나타났다. 일반돌봄군 비중이 높은 것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예방적 돌봄과 일상적 안전망 기능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전담사회복지사 344명, 생활지원사 4,273명, 일반돌봄군 65,384명으로 가장

큰 규모를 보였다. 이어 전라남도와 경상북도 역시 높은 고령화율과 함께 서비스 운영 규모가 크게 나타났다.

생활지원사 1인당 평균 담당 이용자 수는 일반·중점돌봄군 기준 16.2명이었다. 다만 중점돌봄군과 퇴원환자군은 서비스 강도와 수행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단순 인원 기준만으로 업무 부담을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이용자 특성과 서비스 강도를 반영한 인력 배치 기준 개선과 함께 전문 생활지원사 제도 도입 등 새로운 운영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핵심 인력인 생활지원사의 인

<표 1> 17개 광역별 노인 인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및 수행기관 현황 (2026년 2월 기준)

시도	인구	노인인구	노인인구비율	독거노인인구	독거노인비율 (전체 노인 중)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현원	전체 수행기관 수	기관 1개소당 이용자 수(명)
전국	51,609,121	11,125,016	21.6%	2,475,614	22.3%	476,326	684	696 (평균)
서울특별시	9,286,528	1,941,535	20.9%	375,825	19.4%	36,997	73	507
부산광역시	3,212,144	830,551	25.9%	195,355	23.5%	31,614	45	703
대구광역시	2,315,299	521,031	22.5%	123,463	23.7%	29,605	40	740
인천광역시	3,066,605	595,824	19.4%	125,861	21.1%	13,800	25	552
광주광역시	1,437,279	273,938	19.1%	64,441	23.5%	13,535	19	712
대전광역시	1,456,694	284,850	19.6%	65,982	23.2%	15,999	23	696
울산광역시	1,085,657	210,214	19.4%	45,129	21.5%	8,343	14	596
세종특별자치시	406,801	50,149	12.3%	9,957	19.9%	1,449	3	483
경기도	14,026,937	2,545,222	18.1%	499,202	19.6%	56,507	114	496
강원특별자치도	1,516,330	411,420	27.1%	104,435	25.4%	24,433	37	660
충청북도	1,632,229	379,301	23.2%	92,587	24.4%	19,796	28	707
충청남도	2,233,847	514,938	23.1%	124,289	24.1%	31,502	36	875
전북특별자치도	1,735,370	463,396	26.7%	115,978	25.0%	37,187	53	702
전라남도	1,738,419	497,518	28.6%	132,458	26.6%	51,427	48	1071
경상북도	2,570,057	708,897	27.6%	180,627	25.5%	51,647	57	906
경상남도	3,212,076	760,766	23.7%	192,042	25.2%	43,809	59	743
제주특별자치도	676,849	135,466	20.0%	27,983	20.7%	8,676	10	868

<표 2> 17개 광역 시도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수와 이용자 군별 현황 (2026년 2월 기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배정 인원)

	전담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	생활지원사 1인당 이용자* (일반+중점)(명)	일반	중점	퇴원
총계	2,607	33,910	16.2	505,908	43,462	9,891
서울특별시	237	2,951	16.4	44,328	3,929	993
부산광역시	180	2,291	15.7	32,946	3,020	683
대구광역시	143	2,003	15.7	28,757	2,623	586
인천광역시	74	1,002	15.8	14,646	1,192	287
광주광역시	80	984	15.5	13,899	1,309	260
대전광역시	82	1,145	15.9	16,788	1,380	339
울산광역시	48	587	15.6	8,404	733	232
세종특별자치시	8	100	15.9	1,469	125	33
경기도	344	4,273	16.6	65,384	5,642	1,096
강원특별자치도	137	1,772	16.5	27,080	2,141	509
충청북도	124	1,472	16.5	22,423	1,914	417
충청남도	160	2,129	16.0	31,377	2,661	640
전북특별자치도	181	2,536	15.6	36,468	3,144	650
전라남도	271	3,513	17.3	56,008	4,624	1,159
경상북도	262	3,625	16.0	53,230	4,646	993
경상남도	228	2,926	15.9	42,963	3,549	817
제주특별자치도	48	601	17.6	9,738	830	197

* 퇴원환자군은 수행기관별 이용인원 규모의 차이가 커, 본 분석에서는 제외함

구사회적 특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표 3>).

2026년 2월 기준 전국 생활지원사는 약 3만 4천 명 규모이며, 이 가운데 여성은 33,655명으로 전체의 98.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지원사의 평균 연령은 56.3세로, 50대와 60대 초반 인력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특히 65세 이상 생활지원사도 약 2,300명 이상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상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순으로 생활지원사 규모가 컸으며, 이는 고령 인구와 서비스 수요가 높은 지역일수록 인력 규모 또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근속연수는 전국 평균 37.9개월(약 3년 2개월)로 나타났다. 세종특별자치시는 21.9개월로 가장 짧았으며, 서울특별시 44.2개월, 충청남도 41.2개월, 전북특별자치도 42.0개월은 상대적으로 긴 수준을 보였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시행 6년 이상 경과한 점을 고려할 때, 장기근속 유인 체계 마련과 안정적인 인력 유지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돌봄인력 감소로 서비스 품질 향상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충분한 인력 확보와 처우 개선 방안, 그리고 돌봄인력 대체 방법 등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

스가 얼마나 제공되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4>). 2025년 1년 동안 제공된 서비스 현황(1월~12월 평균)을 보면 일반적으로 중점돌봄군은 1인당 월 평균 약 20시간, 일반돌봄군은 약 5시간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서비스별로 살펴보면 중점돌봄군은 가사지원이 월 평균 718분으로 가장 많고, 방문안전 307분, 이동 지원 109분 순으로 안전안부서비스 외 가사 및 이동 지원 등 일상생활지원 서비스가 대부분이다. 일반돌봄군은 일부 가사 지원 서비스 이용자를 제외하고 월 평균 방문안전 137분, 전화안전 56분으로 안전안부 확인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각 서비스별 이용자 평균임).

위의 통계로 볼 때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예방적 안부 확인 기능 중심의 서비스 구조로 사회관계 형성, 자조모임, 신체·정신건강 프로그램 등 사회참여 및 생활교육 영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관계형 프로그램보다 생활밀착형 지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서

노인역량 활용사업 참여자 활용

<표 5>는 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자 규모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이 노인일자리사업에서

<표 3> 17개 광역 시/도별 생활지원사 현황

(2026년 2월 기준 누적 근무인원 기준)

시도	총계	성별		연령						평균 근속연수 (개월)	입사자	퇴사자
		남	여	평균 (세)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65세 이상)			
전국	34,100	445	33,655	56.3	51	371	4,437	17,808	9,066(2,367)	37.9	4,640	429
서울특별시	2,959	84	2,875	57.5	4	14	208	1,571	991(171)	44.2	342	27
부산광역시	2,310	10	2,300	55.5	2	14	337	1,377	500(80)	40.6	217	17
대구광역시	2,036	5	2,031	53.7	4	18	382	1,396	230(6)	38.0	260	36
인천광역시	1,030	18	1,012	57.8	3	5	87	471	348(116)	36.3	181	41
광주광역시	1,000	8	992	55.9	4	7	116	585	260(28)	29.2	212	15
대전광역시	1,146	12	1,134	56.8	1	4	107	656	325(53)	39.5	127	5
울산광역시	592	1	591	55.3	1	3	73	388	123(4)	38.9	54	5
세종특별자치시	103	6	97	54.3	0	1	24	48	25(5)	21.9	34	4
경기도	4,297	56	4,241	56.1	7	40	545	2,353	1,175(177)	39.6	501	50
강원특별자치도	1,723	17	1,706	55.4	5	36	266	920	380(116)	30.1	405	22
충청북도	1,469	33	1,436	56.1	1	32	224	670	402(140)	30.5	337	32
충청남도	2,133	27	2,106	56.7	5	35	303	946	567(277)	41.2	238	18
전북특별자치도	2,549	18	2,531	57.0	0	18	266	1,323	766(176)	42.0	199	17
전라남도	3,510	51	3,459	56.6	5	51	512	1,586	998(358)	37.0	501	34
경상북도	3,666	37	3,629	55.8	2	51	591	1,786	987(249)	36.2	556	55
경상남도	2,978	31	2,947	56.8	7	33	339	1,509	795(295)	35.8	454	51
제주특별자치도	599	31	568	58.6	0	9	57	223	194(116)	39.3	22	0

<표 4>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 현황 - 중점 및 일반

(2025년 1월~12월 평균) (단위: 분)

전국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12월) 평균
중점	방문안전	282	310	313	332	296	308	323	289	327	281	305	323	307
	전화안전	49	51	50	54	39	48	57	51	55	47	48	55	50
	ICT안전	16	14	10	11	25	13	46	46	15	10	10	12	19
	사회관계	9	13	30	65	73	53	43	39	59	61	48	25	43
	자조모임	2	2	6	13	65	15	10	7	13	11	11	4	13
	신체건강	38	42	48	53	56	49	51	49	52	42	47	48	48
	정신건강	42	49	59	67	63	59	59	55	64	51	56	49	56
	이동지원	99	99	107	113	179	101	105	95	108	97	101	100	109
	가사지원	643	724	747	788	726	717	763	679	768	638	692	735	718
일반	방문안전	128	137	142	157	114	132	151	129	148	123	132	146	137
	전화안전	55	56	57	61	45	55	62	57	61	53	54	60	56
	ICT안전	14	17	10	9	23	11	46	41	12	8	8	12	18
	사회관계	9	16	50	97	68	76	51	49	85	88	75	31	58
	자조모임	4	5	16	27	61	27	20	14	24	25	24	7	21
	신체건강	22	26	29	33	36	30	33	27	32	26	29	28	29
	정신건강	23	27	34	40	37	36	37	33	40	35	35	30	34
	이동지원	37	41	41	43	49	38	39	41	42	42	42	41	41
	가사지원	107	114	104	121	112	99	120	106	113	94	107	112	109

* 각 서비스별 평균 제공시간(분)임

지원 인력을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이다. 2025년 6월 기준 전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은 670개소, 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 수행기관은 122개소로 18.2% 수준이다. 즉 전국적으로 보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5곳 가운데 1곳 정도만 노인역량 활용사업을 함께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수행기관 참여율로 보면 지역별로는 3개소 중 2개소가 참여하는 세종 외 대구 40%, 충북 37.5%, 광주 36.8% 순으로 참여율이 높게 나타

났다. 2025년 6월 말 기준 노인역량활용사업 전체 참여자인 163,327명을 기준으로 볼 때, 참여자 수를 보면 경기도는 참여자 수가 27,563명으로 가장 많지만 경기도 내 수행기관 중 11.4%만이 참여하고 있다. 이것은 인력 규모와 실제 수행기관 연계가 반드시 비례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며 또한 향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현장에서 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자를 보완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 5> 광역별 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자(전체) 및 수행기관 참여 현황 및 참여 비율

구분	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자 수 ¹⁾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수 ²⁾	사회서비스형 참여 수행기관 비율	사회서비스형 참여 수행기관 수 ²⁾
총계	163,327	670	18.2%	122
서울특별시	16,178	70	15.7%	11
부산광역시	13,188	45	20.0%	9
대구광역시	8,677	40	40.0%	16
인천광역시	9,103	24	20.8%	5
광주광역시	6,218	19	36.8%	7
대전광역시	4,748	23	17.4%	4
울산광역시	3,519	14	14.3%	2
세종특별자치시	968	3	66.7%	2
경기도	27,563	114	11.4%	13
강원특별자치도	9,477	36	22.2%	8
충청북도	5,455	24	37.5%	9
충청남도	9,619	36	25.0%	9
전북특별자치도	16,216	53	17.0%	9
전라남도	6,948	48	18.8%	9
경상북도	10,909	56	7.1%	4
경상남도	10,677	55	5.5%	3
제주특별자치도	3,864	10	20.0%	2

1) 천재영·오우라·신서우·남기철·손창균·이설아·전용호·주경희·이진아·홍유빈·양유정. (2025).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실태조사. 서울: 한국노인인력개발원. (p.16.) (원자료: 2025년 6월말 기준 노인일자리 참여 노인 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 정보시스템)

2)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2025). 2025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현황 (6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내부자료.

지역통합체계 내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노인일자리사업과의 연대 가능성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현재 지역사회 내 취약한 고령 이용자를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일상적 돌봄을 담당하는 핵심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2026년에는 퇴원환자군을 신설하여 통합돌봄 체계 내 기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신 현황 자료를 종합하면, 지역별로 노인 인구 규모와 독거노인 비율, 수행기관 수, 생활지원사 규모, 서비스 제공시간과 내용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이 확인된다. 고령화율과 독거노인 비율이 높아 기본적인 돌봄 수요 자체가 높은 지역, 수행기관이나 생활지원사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서비스 내용 역시 관계형 프로그램보다 방문안전, 가사 지원, 이동 지원처럼 생활 밀착형 지원에 더 많은 시간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는 실제 생활현장에서 정기적이고, 장기적으로 세밀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구조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을 고려할 때,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지원사 인력만으로 모든 수요를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통합돌봄 체계 속에서 보완 가능한 지원 인력 보완을 추가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특히 노인일자리사업 내 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자는 생활지원사의 부담이 집중되는 반복적인 생활 밀착형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인력 활용의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자의 참여를 위해서는 현재 제공 중인 서비스 내용과 시간, 평균 제공 수준을 바탕으로 어떤 영역에서 현장 부담이 크고, 지원이 필요한지 세밀한 파악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건강 상태가 비교적 안정적이고 반복적인 안부 확인이 필요한 일반돌봄군을 위해 안부 확인 보조, 생활환경 점검, 실태조사 지원, 은둔형 노인 발굴활

동 지원과 같은 방식의 역량활용사업 인력 활용을 고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점돌봄군, 퇴원환자군 등 상태 변화 가능성이 높고 즉각적 판단과 전문적 의료지식이 필요한 영역은 기존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이원화를 고려할 수 있다. 이에 더해 노인 공공주택 등 앞으로 확대가 예상되는 주거 기반 서비스 환경에서는 청소, 환경 점검, 공용공간 확인, 이용자 생활 모니터링 보조와 같은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향후 통합돌봄 체계는 단일 서비스 중심이 아니라 지역 내 다양한 정책사업과 인적 자원이 연계되는 방식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계가 이루어질 때 지역사회 기반 통합돌봄의 실질적 실행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2026). 2026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퇴원환자 단기 집중 서비스 매뉴얼.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2025). 2025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기초통계 정례보고 (1월~12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내부자료.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2025). 2025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현황 (6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내부자료.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2026). 20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기초통계 정례보고 (2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내부자료.
- 보건복지부. (2026). 20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 천재영·오우라·신서우·남기철·손창균·이설아·전용호·주경희·이진아·홍유빈·양유정.(2025).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실태조사. 서울: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통합돌봄과 노인일자리 연계 방안



홍선미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① 통합돌봄 제도화와 노인일자리의 정책적 의미

2026년은 한국 돌봄정책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진입하는 시점이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과 함께, 통합돌봄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될 것인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커지고 있다. 통합돌봄은 단순히 서비스의 양을 늘리는 정책이 아니다. 의료, 요양, 돌봄, 주거, 일상생활 지원처럼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서비스를 한 사람의 삶 속에서 통합적으로 연결하는 정책이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돌봄서비스의 공급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과 서비스를 잘 연결하는 전달체계의 작동이 핵심이다. 지역 안에서 누가 생활상의 위험 신호를 발견하고, 누가 필요한 기관과 서비스로 연결하며, 누가 지속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살필 것인가가 통합돌봄의 성패와 직결된다. 이러한 점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이 단순한 고령자 고용정책을 넘어 통합돌봄의 실행 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는가는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지닌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지난 20여 년간 노후소득 보전과 사회참여 확대라는 목표 아래 꾸준히 발전해 왔다. 2026년 노인일자리사업은 총 115만 2천 개 규모로 확대되었고, 전년 대비 5만 4천 개 증가한 역대 최대 수준이다(보건복지부, 2026a). 제도 초기에는 환경정비나 공공시설 보조, 안내 활동과 같은 참여형 공익활동이 주를 이루었으나, 노인공익활동사업 가운데에도 노노케어나 취약계층지원 유형과 같이 지역사회 내 욕구를 반영하면서 공식적인 서비스를 보완하는 역할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 노인일자리사업은 지역사회 서비스 전달과 생활지

원 기능을 흡수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김가원 외, 2024). 2026년에는 사회서비스형 사업에서 재편된 노인역량활용형 일자리가 크게 확대되어 19만 7천 개 규모로 편성되었다.

노인역량활용형은 돌봄, 안전, 환경 등 사회적 수요가 높은 영역에 중점 배치하는 유형으로, 건강과 교육, 경력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베이비붐 세대의 경험과 역량을 적극 활용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도록 하는 정책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026년도 통합돌봄 관련 노인역량활용사업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총 32건의 사업이 승인되었고, 총 사업량은 1,382명, 총예산은 약 117억 원 규모다(보건복지부, 2026b). 사업 구성에는 통합돌봄 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공공시설 운영 지원, 건강지킴이, 통합돌봄서포터즈, 모니터링단, 주거복지지원단과 같은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통합돌봄 재택서비스 도우미, 푸드뱅크 '그냥드림' 관리자, 안심귀가 도우미, 유아돌봄 특화형 시범사업과 같은 신규 직무도 등장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2026년부터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서 우선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우선지정일자리'를 지정하도록 하였으며, 여기에 지역사회 통합돌봄¹⁾ 지원이 포함되면서 관련 일자리의 규모와 기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5). 노인일자리가 통합돌봄을 비롯하여 지역사회의 생활 지원 영역으로 확장하면서 생활현장과 제도를 잇는 역할이 커지고 있으며, 중앙정부 및 지

노인일자리가 통합돌봄을
비롯하여 지역사회의
생활지원 영역으로 확장하면서
생활현장과 제도를 잇는
역할이 커지고 있으며,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통합돌봄
정책과 맞물려 지역의
실행 자원으로 기능할 가능성도
점차 커지고 있다.



알기 쉬운 요약

- ◎ (통합돌봄 제도화와 노인일자리의 정책적 의미) 통합돌봄이 본격화되는 2026년, 노인일자리사업은 단순한 고용정책을 넘어 지역 돌봄을 뒷받침하는 실행 인프라로 재조명됨
- ◎ (통합돌봄 전달체계와 노인일자리의 협업) 통합돌봄의 핵심은 발굴·연계·모니터링이며, 노인일자리사업은 생활권 현장에서 이를 보완하는 협업 자원으로 기능함
- ◎ (통합돌봄 연계형 일자리로의 전환 조건) 노인일자리가 통합돌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려면 교육 및 슈퍼비전, 협업체계, 지속 가능한 사업 운영 기반, 성과 평가의 재설계 등이 필요함
- ◎ (통합돌봄의 실행 인프라로 재정의) 노인일자리사업은 초고령사회에서 돌봄의 공백을 메우는 보완재이자 지역사회 돌봄을 작동시키는 핵심 실행 기반으로 재정의함

1)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지원을 위한 건강관리와 일상생활돌봄 보조,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통합지원 신청·발굴 및 모니터링 보조 등 업무 수행

자체의 통합돌봄 정책과 맞물려 지역의 실행 자원으로 기능할 가능성도 점차 커지고 있다.

② 통합돌봄 전달체계와 노인일자리의 협업

통합돌봄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의 책임 아래 운영되며, 대상자 중심의 통합지원 절차를 기반으로 작동한다. 일반적으로 통합지원 절차는 대상자 발굴과 신청, 욕구조사와 통합판정,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서비스 연계와 제공, 모니터링과 종결로 이어진다. 시군구와 읍면동 행정조직,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같은 공공기관, 보건소와 의료기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이 협력하며 의료·요양·주거 등의 사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고 지원하는 구조이다(보건복지부, 2026c). 그러나 공식 전달체계가 존재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놓치기 쉽다는 점이 문제다. 제도가 존재하고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더라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지 못하면 정책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통합돌

통합돌봄의 첫 단계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발견하는 것이다. 발굴형 노인일자리사업은 공식적인 전달체계가 포착하지 못하는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권 서비스로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봄은 행정적 발굴과 생활현장에서의 발견이 결합될 때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행정정보는 고위험 상황으로의 변화를 적시에 포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건강 상태가 나빠졌는지,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었는지, 주거환경이 안전하지 않은가는 일상적 접촉과 생활공간에서 먼저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지역사회 안에서 사람을 만나고 생활 변화를 살피며 필요한 기관과 서비스를 연결하는 생활밀착형 자원이 많을수록 통합돌봄의 사각지대와 지역 전달체계의 빈틈을 메울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노인일자리가 통합돌봄의 어느 단계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며 기여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통합돌봄의 절차에서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발굴, 연계, 모니터링의 역할을 통해 의미 있게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가



원 외, 2022). 이에 따라 통합돌봄 시대의 노인일자리는 노후소득 보전과 사회참여 지원이라는 기존 기능을 유지하되, 통합돌봄의 기능에 부합하도록 사업 유형과 수행 역할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통합돌봄 수행 과정에서 긍정적 성과를 낼 수 있는 노인일자리 측면의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권에 기반을 둔 발굴 기능이다.

통합돌봄의 첫 단계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발견하는 것이다. 발굴형 노인일자리사업은 공식적인 전달체계가 포착하지 못하는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권 서비스로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발굴이 늦어질수록 위기는 심화되고, 연계가 지연될수록 돌봄 부담은 더 커진다. 지역의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가족이나 이웃, 주민조직, 자원봉사자와 마찬가지로 생활권 안에서 반복적으로 활동하며 주민과 접촉하는 빈도가 높다. 동네 환경과 주민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고, 공공행정기관보다 더 가까운 위치에서 일상의 변화를 감지하며 접촉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갖는다. 이러한 점에서 생활권 내에서 자주 마주치는 인력을 활용하면, 단발적 방문으로는 얻기 어려운 정보를 확보하고 관계 기반의 접촉을 이어갈 수 있어 매우 효과적인 접근이 될 수 있다.

둘째, 연계와 모니터링 기능이다.

연계형 노인일자리사업은 서비스 신청과 기관 간 연계를 지원하고,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통합돌봄의 핵심은 연계이다. 실제 현장에서는 서비스 자체가 부족한 문제도 있지만, 필요한 서비스가 서로 연결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

가 더 빈번하다. 병원 퇴원 이후 지역 돌봄서비스로 이어지지 못하거나 식사·주거·의료 서비스가 분절적으로 제공되면서 돌봄이 끊기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병원 이용이나 생활 기반의 다양한 돌봄서비스 연결 과정에서 안내와 동행 역할을 수행한다면, 연결의 공백을 줄이고 맞춤형 연계가 가능해진다. 그 외에도 푸드뱅크 관리자나 안심귀가도우미와 같은 사업은 통합돌봄이 지향하는 끊임 없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생활안전의 물리적·관계적 측면에서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셋째, 모니터링과 사후관리 기능이다.

모니터링형 노인일자리사업은 대상자의 안부를 확인하고 생활 상태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살피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모니터링단' 사업은 돌봄필요도를 평가한 이후에 전문가의 상시 방문이 어렵기 때문에,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이용자의 변화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생활상의 변화를 점검하여 서비스 제공 과정에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돌봄에서는 서비스 제공 자체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관계가 형성되고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 정서적 지지와 함께, 건강관리와 복약지도 등의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재고립을 예방하는 기능도 중요하다. '시니어건강지킴이' 사례에서는 건강모니터링에 중점을 두어 운동처방에 따른 건강생활실천을 확인하고, 건강 상태 변화에 맞게 도움을 주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생활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주택의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역할도 있다. 관계 기반의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서비스가 적시에 연결하도록 돕는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의 활동

은 전문가의 역할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다층적으로 연결된 사례관리 구조 안에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상호 보완적으로 협업하는 사례가 된다.

④ 통합돌봄 연계형 일자리로의 전환 조건

노인일자리 영역의 역할은 시군구 통합돌봄 전담조직이나 읍면동 행정복지 인력이 수행해야 할 책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일상생활 지원과 생활밀착형 돌봄을 지원함으로써, 공식적인 통합돌봄 기능이 현장에서 충실히 작동하도록 돕는 보완적 역할에 가깝다. 노인일자리는 통합돌봄 전담조직의 제한된 인력만으로는 충실히 하기 어려운 일상적 접촉, 반복적 관찰, 상시적 모니터링의 공백을 메우는 실행 기제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통합돌봄의 핵심 절차인 발견, 안내, 연계, 모니터링이 현장에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보완 역할이 일회성 활동에 그치지 않고 체계적인 협력 모형 속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통합돌봄형 노인일자리가 수행하는 모니터링, 건강·안전 확인, 생활환경 점검, 안부 확인, 서비스 안내와 같은 활동은 모두 생활현장에 밀착된 기능이다. 이러한 활동은 형식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되며, 참여자의 역할 이해도와 현장 대응 경험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통합돌봄은 단기간에 종료되는 사업이 아니라 대상자의 상태 변화에 따라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지원이 요구되는 정책이다. 따라서 단년도 사업 구조만으로는 돌봄 관계망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지역 안에서 끊임 없이 작동하는 연계 구조와 인력운영

체계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노인일자리가 통합돌봄 전달체계 안에서 의미 있게 기능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기초교육과 슈퍼비전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일정 기간 동일 지역에서 생활하고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 지역의 상황과 생활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주민과의 관계도 비교적 잘 형성되어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러한 특성은 통합돌봄과 연계된 활동이 생활현장의 변화를 파악하고 생활정보와 관계 자원을 축적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된다. 다만 이러한 강점이 단순 방문이나 안부 확인 수준에 머물지 않고 통합돌봄의 실질적 기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교육과 슈퍼비전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현재 수행기관에서는 소양교육, 안전교육, 직무교육이 필수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통합돌봄과의 연계 측면에서는 보다 세분화된 실무교육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의사소통 기술, 건강 및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 위기 징후와 응급상황 대응, 개인정보 보호와 인권 감수성에 대한 민감성, 윤리 기준, 돌봄 관련 서비스의 구조와 연계 절차 등에 대한 기본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는 참여자가 현장에서 단순히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수준을 넘어, 돌봄 대상자의 상황을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실천 역량을 갖추는 데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통합돌봄 연계 직무의 내용을 표준화하고, 통합지원 절차 안에서 발견·연결 지원·모니터링·생활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인력의 역할과 교육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교육은



직무 준비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무 수행 과정과 이후에도 지속적·반복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교육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하고 대응 방향을 자문할 수 있는 슈퍼비전 체계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통합돌봄과 노인일자리 간 협업체계를 구조화해야 한다.

노인일자리가 통합돌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참여 주체들의 선의와 협조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역할이 명확하지 않으면 업무 중복이나 공백이 생기기 쉽고, 연계체계가 불분명할 경우 현장에서는 책임 소재 또한 모

호해질 수 있다. 따라서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고유의 역할 수행을 넘어 전달체계 내 협력적 주체로 기능하려면, 팀 협력에 대한 이해와 역량을 습득할 수 있는 체계적인 사전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시군구, 읍면동, 수행기관 간에는 현장의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자문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통합지원협의체와 같은 공식적 협의기구, 통합지원회의, 정기적인 수행기관 간담회 및 점검회의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협업 체계가 실효성을 거두려면 단순히 정보를 주고받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되며, 각 주체가 어떤 정보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공유하고,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연계하며, 어떤 문제를 누가 책임지고 조정할 것 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통합돌봄 관련



주체 간의 역할과 책임의 경계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역할 분담과 연계 절차를 구체화하고 이를 공식적인 운영지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확보하여야 한다.

현재 돌봄 연계형 노인일자리는 단년도 또는 기간제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통합돌봄처럼 상시성과 지속성이 핵심인 정책과는 구조적으로 불일치할 수 있다. 통합돌봄은 한 번의 개입으로 끝나는 정책이 아니라, 대상자의 상태 변화에 따라 반복적으로 관찰하고 조정해야 하는 장기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업이 매년 새로 편성되고, 수행 방식이 지역별로 편차를 크게 가진다면, 돌봄 관계망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어렵다. 현재 통합돌봄형 노인일자리사업은 우수 사례 발굴을 통해 확산되고 있으나, 지역의 정책 의지, 수행 역량, 협업 수

준에 따라 편차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통합돌봄의 보조 인력을 제공하는 단순한 고령자 일자리사업으로 볼 것이 아니라, 지역 돌봄 인프라의 핵심 인적 자원으로 노인일자리를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의 운영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직무를 표준화하며, 사업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사업의 형식이 아니라, 지역 안에서 돌봄 기능이 실제로 지속되도록 만드는 구조를 갖추는 일이다.

넷째, 성과 평가 체계를 전환하여야 한다.

통합돌봄형 노인일자리의 성과를 참여 인원, 사업량, 집행을 중심으로만 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러한 지표는 사업의 양적 확대를 보여줄 수는 있지만, 통합돌봄이 지향하는 질적 성과를 충분히

설명하지는 못한다. 통합돌봄은 숫자보다 관계의 변화, 서비스 연결의 지속성, 고립 예방, 위험 감소, 생활 안정의 회복 같은 요소를 중시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인일자리의 성과 역시 누가 새롭게 연결되었는지, 어떤 위험이 줄어들었는지, 지역 돌봄망이 얼마나 촘촘해졌는지와 같은 관점에서 평가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서비스 접근성 개선 효과, 고립 예방 사례, 연계 성과, 관계 지속성, 생활 환경 개선과 같은 지표를 반영하면 통합돌봄형 노인일자리의 실제 기여도를 더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노인일자리의 가치는 참여 인원의 규모보다도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얼마나 촘촘하게 보완했는가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평가 전환이 이루어질 때 노인일자리는 단순한 일자리사업이 아니라, 지역 돌봄체계를 떠받치는 실행 기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④ 결론

통합돌봄과 노인일자리의 결합은 단순히 사업을 덧붙이는 문제가 아니라, 통합돌봄의 현장에서 노인일자리가 어떤 기능을 담당하고 어떤 방식으로 작동해야 하는지를 정교하게 설계하는 과업이다. 통합돌봄이 실제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제도와 서비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생활현장에서 사람을 만나고 위험을 발견하고 필요한 지원으로 연결하는 연결망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노인일자리는 통합돌봄의 빈틈을 메우는 보완적 자원이자, 지역 돌봄체계를 상시적으로 작동시키는 실행 주체로 재인식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통합돌봄의 세부 기능에 맞게 사업 유형을 세분화하고, 수행인력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며, 교육·

수퍼비전·협업체계·성과평가 역시 이에 맞게 재구성해야 한다. 무엇보다 노인일자리 정책이 단순한 고용·참여 지원을 넘어 통합돌봄 정책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사회적 기여와 활동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통합돌봄 연계형 직무를 개발·확산하고 정책 간 협업체계를 제도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 차원의 안정적 재정 지원과 관리·운영체계의 안정화를 통해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실행 기반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뒷받침될 때 통합돌봄과 노인일자리의 결합은 초고령사회의 돌봄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며, 궁극적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 돌봄의 성과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가원, 천재영, 홍선미, 강은나, 이상우, 채주석, 유선치, 선지원, 김담이.(2022). 초고령사회 돌봄영역 노인일자리사업 고도화 방안 연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김가원, 박경하, 신상훈, 조준행, 강은나, 남기철, 이석원, 이소정, 최혜지, 한정란.(2024).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20년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김수린, 최혜지, 전용호, 이승호, 손선옥, 최새봄.(2020). 지역사회 통합돌봄 도입에 따른 노인돌봄과 노인일자리사업 연계방안 연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보건복지부.(2025). 노인이 행복한 진짜 대한민국,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세요! [2025년 11월 27일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2026a). 노인일자리, 역대 최대 115만 2천 개 제공 [2026년 2월 2일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2026b).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 보건복지부.(2026c). 보건복지부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안내.

전주시 통합돌봄과 노인일자리 연계 사례를 통해 본 노인일자리사업 개선 방안



한진아
전주시청 노인복지과 팀장

전주시가 말하는 모두가 행복한 통합돌봄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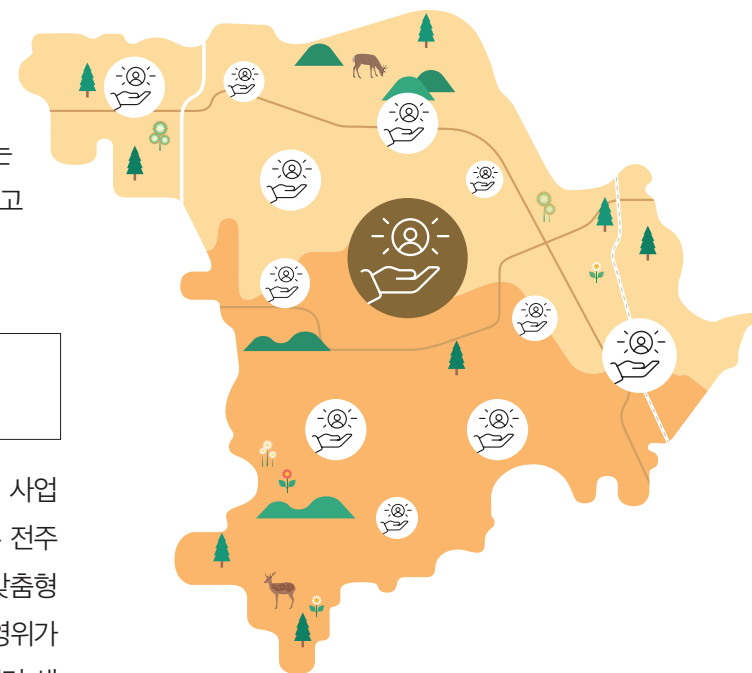
전주는 맛의 고장이다. 그리고 통합돌봄 맛집이다. 전주시는 2019년 보건복지부에서 모델 구축을 위해 실시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시작으로 7년간 다양한 도전과 실패 속에서 현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통합돌봄은 단편적인 서비스 제공 사업이 아닌 이용자의 필요와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조정하는 사업이다. 전주시는 65세 이상 노인과 지체·뇌병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건강관리, 영양지원 등 9개 분야 101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35개 동에는 사회복지직·간호직이 배치되어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가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만큼 충분한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 2026년 통합돌봄 최종 국가 예산은 914억으로 229개 지자체로 단순하게 나누어 보면 4억 남짓이다. 물론 중앙에서는 장기요양, 맞춤형 돌봄 등 기존 국가 돌봄을 우선 연계하도록 하고 있으나 언제 한 번이라도 자원이 남아돌았던 적이 있었던가 생각해 보면 현 예산으로는 충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결론이다. 그런데 2026년 통합돌봄이 본 사업에 들어서면서 대상자 수는 분명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데 반해 국가 사업 예산이 늘기는커녕 줄어들어 그마저도 긴축해야 할 형편이다. 이것이 바로 전주시가 통합돌봄과 노인일자리 연계를 시도한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다. 줄어든 예산만큼 서비스를 줄일 수 없었기 때문에 비용은 적게 들지만, 효과를 더 크게 낼 수 있는 묘책이 필요했고, 이 묘책이 바로 통합돌봄에 노인일 자리를 연계하는

방법이었다. 통합돌봄과 노인일 자리의 유기적 결합은 줄어드는 사업 예산에 대한 궁여지책이었지만 결국 이 선택이 신의 한 수로 부상하고 있다. 자, 이제 전주시가 말하는 모두가 행복한 통합돌봄 이야기를 시작해 보고자 한다.

전주의 새로운 도전, 돌봄에 일 자리를 입히다

전주시 통합돌봄서비스는 9개 분야 101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101개 사업이 모두 전주시 자체 사업은 아니다. 장기요양보험이나 맞춤형 돌봄 같은 국가 돌봄을 포함한다.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이용자가 지역에서 살 수 있도록 하려면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간다. 대개는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식사, 가사 지원, 목욕, 배변활동 지원뿐 아니라 병원 동행, 복약 지원, 방문간호, 운동 지도, 방문 진료까지 연계되어야 하며 돌봄서비스를 받는 거점인 사는 곳 주거 역시 문턱이나 미끄럼 등 낙상의 위험이 없어야 하고 안전 손잡이 등 무장애 공간이 제공되어야 한다. 병원이나 시설처럼 24시간 돌봄 사람이 없는데 안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도 고민해야 한다. 손이 많이 필요하다.

전주시는 지난 7년간, 집안에 갇혀 꼼짝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고민해 왔다. 하지만 늘어나는 대상자와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구축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적었다. 예산 투입을 최대한 줄이고 서비스를 늘리기 위해 전주시가 선택한 돌파구는 노인일자리사업이었다. 2019년 우리나라에 사회서비스형 일자리가 도입된



후 2020년 전주시는 통합돌봄 서포터즈라는 104명의 어르신 일 자리를 개발한 경험이 있었다. 통합돌봄 서포터즈는 통합돌봄 사업을 지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간의 단순 환경정비 등의 역할이 아닌 은퇴한 전문 인력을 투입해 통합돌봄 현장에서 공공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모세혈관의 역할을 수행하며 통합돌봄 확장은 물론 새로운 노인일자리 모형을 제시했던 것이다. 이러한 선행 경험을 통해 전주시는 부족한 예산과 서비스를 보강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인일 자리를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최근 높은 학력과 경력을 가진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 인구에 진입하면서 단순 봉사보다는 사회적 기여와 적정 소득을 원하게 되었고, 은퇴 후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노인일 자리의 인기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노인일자리 아이디어만 있다면 은퇴한 전문 인력의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이에 전

알기 쉬운 요약

- ◎ 전주가 말하는 모두가 행복한 통합돌봄 이야기
- ◎ 전주의 새로운 도전, 돌봄에 일 자리를 입히다
- ◎ 어르신의 삶 속으로 스며든 돌봄과 일자리
- ◎ 더 촘촘하고 단단하게 다져지는 노인일자리

주시는 그간 통합돌봄 서포터즈 사업을 함께 수행하던 전주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과 머리를 맞대고 노인일자리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통합돌봄서비스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노인일자리 연계 전주시 통합돌봄서비스는 19종이 되었고, 수행기관도 의료사협뿐 아니라 지역 내 노인일자리 전문 기관인 시니어클럽 3개소와도 결합하게 되었다. 전주시에서 실현되고 통합돌봄 연계 일자리사업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 5개 분야(건강관리, 생활 지원, 영양 지원, AI 스마트 케어, 홍보 지원)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건강관리 분야이다.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이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정 내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방문 진료 등 의료서비스를 비롯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공되는 건강관리 서비스가 필요하다.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마련된 일자리는 건강지킴이,

방문운동지도지킴이, 생애말기길동무, 시니어 재활홈트사업, 함께 요리조리 사업이 있다. 건강지킴이 사업은 대상자 가정에 정기적 방문을 통해 이용자의 안부를 확인하고 이용자 스스로 건강체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을 한다. 현재 195명이 역량 활용형으로 참여 중이며 2인 1조로 주 1회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혈압, 혈당 자가 체크 지원, 인지 활동 지원 등 400여 명의 어르신을 돌보고 있다. 또 주 1회 방문 대상이 아닌 건강관리가 필요한 대상 1,500여 명에게 매주 건강콜(전화)을 제공하고 있다. 건강지킴이 사업은 전주시 대표 통합돌봄 노인일자리사업으로 2020년 104명을 시작으로 21년 254명, 22년 274명으로 확산되었으며, 2021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MOU를 통해 23년에는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두 번째, 방문운동지도지킴이는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전문 직역이 제공하는 운동 지도, 낙상 예방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시 동행하여 업무를 지원하고 이후 모니

터링 및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세 번째 생애말기길동무는 말기 환자 등 집에서 생애 말기를 보내기를 희망하는 이용자에게 정서 지원 호스피스, 장례 절차 안내, 유가족 지원 등 생애 말기 전·후를 지원한다. 네 번째 시니어 재활홈트사업은 주 1회 방문하여 함께 운동하거나 산책을 통해 건강생활을 유지하도록 홈트레이닝을 지원한다. 다섯 번째, 함께 요리조리사업은 영양사로 퇴직한 참여자가 고혈압, 당뇨 등 질환자에게 식습관 교육과 함께 집으로 찾아가 건강 식사를 대상자와 만들어보는 사업이며, 공유 주방을 활용한 질환별 요리 교실도 운영된다.

둘째, 생활 지원 분야이다. 대상자가 노인일 경우 장기요양보호사, 장애인인 경우 활동 보조인이 주로 생활 지원을 하고 있으나, 보다 세심한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특히 병원 동행의 경우는 요양 시간을 많이 뺏기거나 자녀들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일자리사업단으로 만들어졌다. 병원 등 안심 동행 서비스는 역량활용형 62명이 참여 중이며 2인 1조 3교대로 운영 중이며 병원, 관공서, 산책, 생활민원대행 등 동행 서비스를 지원하며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두 번째, 소소한 홈케어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전기·가스·조명 안전점검 및 낙상 위험물 제거, 전등·문고리·수도꼭지 등 집안에서 발생하는 소규모 수선과 위생관리를 전담한다. 세 번째 퇴원 환자 연계 및 중간집 안심 길동무는 퇴원을 앞둔 대상자에게 통합돌봄서비스를 안내하고, 퇴원 후 가정으로 복귀전에 단기간 이용할 수 있는 중간집에서 입소자에 대한 돌봄 및 말벗 서비스를 제공한다. 네 번째 시니어 정원관리사업은 어르신 가구에 정리되지 않은 정원(베란다, 화단)을 관리를 지원한다.

셋째, 영양 지원 분야이다. 전주시는 어르신의



건강 상태에 따라 도시락, 밑반찬, 영양죽, 음식 재료를 제공하여 영양뿐 아니라 잔존기능을 유지까지 고려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당뇨 및 고혈압으로 인해 식이조절이 필요한 대상자가 많지만 서비스 단가가 맞지 않고 품이 많이 드는 저염·저당 도시락 제공까지는 불가능했다. 하지만 올해는 시니어클럽 시장형 사업단과 손을 잡아 소량이지만 저염·저당 도시락 사업을 시작했다. 당류는 줄이고 염도는 낮추게 되면 맛이나 양을 맞추기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건강 식단을 선호하는 수요가 늘어나는 경우 시장형 일자리로서 수익성까지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에게 전달하는 배달서비스는 시니어 영양 라이더라는 사업단을 만들어 도시락 배달, 식사법 교육, 안부 확인 등을 실시한다.

넷째, AI 스마트케어 분야이다. 지역 내 돌봄은 병원이나 시설과 달리 돌봄 공백이 불가피하다. 이에 전주시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안전망을 구축하는 스마트 돌봄 플랫폼을 운영 중이다. 24시간 응급상황 관제를 위한 활동 센서, 화재경보기,





전주시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안전망을 구축하는 스마트 돌봄 플랫폼을 운영 중이다. 24시간 응급상황 관제를 위한 활동 센서, 화재경보기, 응급 호출벨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소와 다른 패턴 발생 시 선제적으로 예측 대응이 가능하며, 개인 복약 시간, 돌봄 방문일정 안내 및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다.

응급 호출벨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소와 다른 패턴 발생 시 선제적으로 예측 대응이 가능하며, 개인 복약 시간, 돌봄 방문일정 안내 및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다. 단, 관제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그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 스마트 돌봄 플랫폼 지킴이이다. 이 외에도 VR을 활용한 인지 저하 예방 및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방문형, 내방형)하는 VR 치매예방지킴, AI 기반 인형 두리챗봇 사용법 및 관리를 지원하는 두리챗봇 지킴이가 노인일자리로 배치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홍보·지원 분야이다. 먼저 조사원 22명, 코딩 2명으로 구성된 시니어 설문조사단은 전주시 행정에 필요한 설문조사를 대행하는 자리로 통합돌봄 대상자 만족도 조사, 75세 도래자 전수조사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업무보조지킴이는 건강지킴이가 작성한 혈압·혈당 등 매일매일 누적되는 현장 활동 일지 취합 및 분류,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 등 필요한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역

할을 수행한다.

역량활동 참여자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업무별로 철저한 사전 교육을 통해 업무의 전문성을 높인다. 통합돌봄 서포터즈 기본 교육은 통합돌봄과 노인일자리에 대한 이해, 개인 정보 교육 등 소양교육, 노년기 건강관리, 운동관리, 건강체크방법, 의사소통방법, 감염병 예방 및 약물 관리, 장기요양제도의 이해, 웰다잉과 사전연명의 이해 등 직구교육과 안전교육으로 구성되며 48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건강지킴이, 병원 동행 등 세부 직무별로 특화교육을 15시간씩 이수해야 현장에 투입될 수 있으며, 31시간의 보수교육을 월례회의 등을 통해 이수한다.

전주시는 통합돌봄과 연계한 노인일자리사업이라는 도전으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은퇴한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부족한 돌봄서비스를 보충함으로써 이용자에게 보다 세심하고 충분한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게 되었고, 노인일자리 참여자에게는 본인이 가진 경력과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자부심과 보람을 갖게 하였다. 또한 양자 모두 서로 돕는 활동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게 되고 스스로 건강을 돌보는 긍정적 파급효과 또한 크다. 따라서 일자리에 돌봄이라는 새로운 옷을 입힌 전주시의 도전과 진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이다.

어르신들의 삶 속으로 스며든 돌봄과 일자리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돌봄서비스 일자리가 전주시 통합돌봄 사업에 어떻게 녹아내렸는지 알아볼 순서이다. 전주시 통합돌봄 사업 특징 중 건강-의료 안전망, 효과성 검증, 퇴원 환자부터 생애 말기 돌봄 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첫 번째 「건강-의료 안전망」 속 노인일자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전주시 건강-의료 안전망은 말 그대로 이용자의 건강을 다양한 보건, 의료, 돌봄을 통해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것이다. 일단 통합돌봄 대상자로 선정되면 모든 이용자는 건강 상태에 따라 3차군으로 나뉘게 된다. 군 분류는 질병 유무, 조절 상태, 우울 등 정신 건강 상태, 일상생활 수행 능력, 사회적 고립도를 고려하여 1차군(일반만성질환군), 2차군(만성질환 고위험군), 3차군(동네돌봄의사 집중관리군)으로 나뉘게 되며 각 군에 맞는 의료-돌봄서비스가 제공된다. 또한 공백 없는 돌봄을 위해 1차군은 월 2회, 2차군은 월 4회, 3차군은 월 6회의 촘촘한 방문주기가 적용된다. 돌봄 방문자는 각 동 담당자와 노인일자리 인력인 건강지킴이이다.

행정 인력만으로 부족한 돌봄 손길을 건강지킴이를 활용해 모세혈관처럼 촘촘히 스며들게 한다. 건강지킴이는 각 가정에 주 1회 정기 방문하여 혈압, 혈당 등 자가 건강 체크를 도와 이용자가 스스로 건강 징후를 확인하고 건강생활 실천을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 건강지킴이는 방문 전 조끼·명찰을 착용하고 방문 인사와 함께 건강 박수 10분, 건강 확인 30분, 개인 위생 및 집 안 환경 확인 10분, 인지활동 30분, 마무리 순으로 한 시간 반 정도 활동이 이루어진다. 활동 후 조사된 건강 자료는 주민센터와 공유되어 위기 상황 및 급격한 건강 변화에 대해 조기 대응이 가능하며, 동네돌봄의사 코칭 사업 또는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일차의료방문진료수가 시범으로 연계된다. 건강지킴이 활동은 현장의 부족한 돌봄 인력을 보충하고 있으며 일자리 참여자와 서비스 이용자가 모두 건강해져 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고 있으며, 서로 돌봄으로 강한 유대감 형성 등 공동체 회복의 효과가 있다. 설문조사 결과 일자리 참여 후 건강 개선, 자신감 개선, 가족 관계 개선, 경제·사회활동에 도움이 되었다는 만족도 결과가 나왔다. 이 외에도 방문운동지도서비스, 낙상예방작업치료서비스, 구강관리서비스 제공,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위생사 등과 함께 동행하여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고, 이후 자가 운동 실천 지원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건강의료안전망 속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두 번째는 「효과성 검증」 사업 속 노인일자리를 살펴보면, 건강지킴이 195명의 주기적 방문을 통해 수집된 건강 자료와 동 담당자가 실시한 건강면접 조사, 허약 조사, 우울 조사 자료, 그리고 24명의 시니어 설문조사단이 실시한 서비스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결과는 매년 효과성 검증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사업의 질 향상을 위해 환류되고 있다. 특히 시니어 설문조사단은 다양한 행정 분야에서 필요한 조사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그간 매년 실시해 온 전주시 75세 도래자 전수조사 등 정책 방향 수립에 도움을 주고 있다.

세 번째는 「퇴원환자부터 생의말기 돌봄까지 지원」 사업 속 노인일자리를 살펴보면 퇴원 환자 연계를 위해 MOU를 맺은 병원 또는 경로당, 복지관 등에 홍보단을 파견하여 대상자 발굴 및 사업 홍보를 실시하고, 가정으로 찾아가는 사전 연명 제도 안내 및 인생을 정리하는 인생 노트 작성 지원, 그리고 생애 말기 대상자를 중심의 장례 등 가정 내 임종 준비 안내, 유가족 상담·지원 등 생의말기길동무 서비스가 있다.

이 외에도 보호자의 부재로 병원이나 관공사업 무처리에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안심동행 지원사업은 콜센터를 통해 접수된 대상자의 자택에서 병원까지 안전하게 동행하며 진료 접수 및 검사 대기 과정을 돕고, 진료 후 수납 보조, 약국에 동행하여 복약지도를 함께 들고 안전한 귀가를 지원하는 것으로 60명의 참여자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처럼 전주시는 지역 내 거주를 지원하는 다양한 돌봄 사업들을 노인일자리와 연계되어 추진하고 있으며 참여자와 이용자가 함께 행복해지는 긍정의 시너지 효과를 만들고 있다.

더 촘촘하고 단단하게 다져지는 노인일자리

마지막으로 전주시 통합돌봄과 노인일자리 연계 사업 추진 경험에 비추어 노인일자리사업의 개선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먼저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모 사업 추진 등 기회 다각화이다. 현장에는 많은 필요와 아이디어가 있으나 기존 일자리 모델의 답습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에 한계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공모 사업 등 새로운 도전 기회를 확대하고 충분히 실험해 볼 수 있는 예산과 인력이 투입된다면 다양하고 새로운 일자리들이 다수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는 통합돌봄전문일자리사업단 설치이다. 기존의 많은 사람이 한 가지 업무에 종사하는 단순 노무의 경우 전담 인력이 적어도 운영될 수 있으나, 사람을 돌봐야 하고 소규모 인력이 다양한 직종에 참여해야 하는 돌봄 일자리를 운영하려고 할 경우 사전 교육, 참여자 관리, 서비스 수혜자 지원까지 보다 많은 인력과 전문적 운영체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노인일자리 통합돌봄의 한 축으로 잡고 갈 수 있는 보건의료, 복지 돌봄, 사회적경제전문일자리운영사업단 설치가 필수적이라고 본다. 세 번째는 연중 사업이 필요한 일자리의 지속성 담보를 위한 방안 모색이다. 노인일자리 경우 10개월 사업으로 돌봄서비스의 연속성이 확보되지 않는다. 건강지킴이 등 노인일자리 연계사업은 연 2개월의 공백이 있어 이용자에게 연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 이에 연속적 사업이 필요한 사업단에 대해서는 연중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까지 전주시 통합돌봄과 연계한 노인일자리 사례에서 보이듯이 돌봄은 이제 시대가 요구하는 필연적 과제이다. 돌봄의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노인일자리사업과 슬기롭게 연계한 윈-윈(Win-Win)의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 싶다.

고령사회의 심과 일

발행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발행인

김수영

편집위원장

양난주

편집위원

김선웅, 이영수, 최성원, 최은숙, 황보연
남미정, 문대영, 박경하, 오유라, 조홍영

등록번호

ISSN 2765-2777

발행일

2026년 6월

주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7(그레이츠송레) 19층,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연구조사부

전화

02-6731-6126

팩스

02-6203-0962

홈페이지

www.kordi.or.kr

웹진

kordi-webzine.co.kr

디자인

(주)케이에스센세이션(02-761-0031)

문의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연구조사부
(02-6731-6126)

- <고령사회의 삶과 일>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연구조사부에서 발행하는 계간지입니다.
- 본 지에 실린 내용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연구조사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동네 생산품

전통시장을 살린 한 끼, 청년몰 안에서 다시 피어난 어르신의 일자리



군산콩보리



◆ 군산콩보리 ◆

- 주소: 전라북도 군산시 신금길 18, 2층
- 문의: 063-732-6065



군산시니어클럽 공동체사업단 '군산콩보리'는 침체되어 가던 전통시장 청년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시작된 노인일자리사업이다. 한때 방문객이 줄어 조용했던 군산공설시장 청년몰은 지금 관광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찾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어르신들이 운영하는 '군산콩보리'가 있다.

군산콩보리는 지역 특산물인 '흰 찰쌀보리'를 활용한 보리 비빔밥과 보리 정식을 판매하는 음식점형 공동체사업단이다. 어르신들은 식재료 준비부터 조리, 위생 관리, 고객 응대까지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며, 오랜 삶의 경험과 손맛을 바탕으로 건강하고 정직한 한 끼를 만들어내고 있다. 단순히 식당을 운영하는 것을 넘어, 어르신 스스로가 지역경제의 주체가 되어 전통시장에 활력을 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최근에는 군산콩보리가 전국적인 관심 속에서 다시 한번 주목받기도 했다. 청년몰 활성화 우수 사례를 다룬 언론보도에서 대통령이 군산공설시장 청년몰 사례를 언급하며, 군산콩보리를 지역과 상생하며 운영되는 대표 사례로 평가한 것이다. 침체된 청년몰 안에서 어르신 일자리와 지역 상권이 함께 살아난 사례로 소개되며, 군산콩보리는 지역 기반 노인일자리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군산콩보리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군산시르네상스사업단, 군장대학교, 한국 노인인력개발원 등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여 성장해 온 지역 협력형 모델이기도 하다. 메뉴 개발과 경영 컨설팅, 홍보 지원, 청년몰 환경 개선 등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여왔으며, 전통시장 활성화 우수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실제 변화로 이어졌다. 청년몰 내 방문객과 점포 이용이 증가하고, 군산콩보리는 합리적인 가격과 정성 어린 음식으로 지역 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사랑받는 식당으로 성장하였다. '군산에 오면 꼭 들러야 하는 식당'이라는 입소문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군산콩보리는 단순히 음식을 판매하는 공간이 아니다. 어르신들의 삶의 경험과 손맛이 담긴 한 끼를 통해 사람과 사람을 잇고, 전통시장과 지역사회를 다시 연결하는 공간이다. 어르신들의 일자리는 이곳에서 지역의 활력으로 이어지고, 한 그릇의 따뜻한 밥은 지역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

전통시장을 살리고, 어르신의 일자리를 키우며, 지역을 다시 연결하는 힘. 그 중심에 '군산콩보리'가 있다.